

# “영세업종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 속히 도입해야”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

규모작을수록 최저임금미만율 ↑  
소상공인들에 현행제도 무의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농·임·어업, 음식점, 주점, 숙박, 편의점 등 영세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일본,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별 구분적용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악한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돼도 영업이익이나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에 벅찬 업종들을 골라 이참에 인상률을 차등적용하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지난해 당시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업, 일반 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별 구분적용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이동용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정용주 경기도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중기중앙회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의견이 모아졌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가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별 구분적용’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안은 ▲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최

저임금 미만율)이 전산업 평균 이상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 전산업 평균 미만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전산업 평균 미만에 모두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통계청이 2016년 기준으로 내놓은 전산업 평균 최저임금 미만율은 13.5% 수준이다. 이는 100명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인원이 13.5명이라는 의미다. 전체 평균 최저임금 미만율을 웃도는 업종은 농·임·어업(42.8%), 숙박 및 음식점업(34.4%),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26.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24.8%), 부동산업 및 임대업(19.5%), 운수업(13.6%) 등이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2017년 기준)은 1~4인 기업이 31.8%, 300인 이상이 2.0%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실정이다.

미만율이 평균 이상인 업종 가운데 1인당 영업이익(전산업 평균 1700만원)과 부가가치(“ 6200만원)가 상대적으로 낮

은 업종을 최종적으로 최저임금 구분적용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입장 발표문에서 “현행 단일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미만율이 높아져 결국 제도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최저임금법에서 지금과 같이 사업별 차이가 극명한 실태를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별 구분적용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예년까지 구태의연하게 구분적용을 논의하던 방식과 관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영향 차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미만을 격차 심화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사업별 구분적용’을 조속히 도입하자는 의견을 이날 오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폼페이오, 3차 방북... ‘비핵화 시계’ 빨라지나

(미국 국무장관)

오늘부터 오는 7일까지 사흘간 방북 후 일본서 한·미·일 장관회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잠시 멈춘 듯한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얼마나 빨리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세 번째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회담 이후엔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이후 일본 도쿄로 이동해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난다. 강 장관은 도쿄에서 3국 외교장관과 회의를 마친 후엔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순방길에 합류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비핵화 추가 논의에 대해서 “잘 되기를 바란다”는 짧은 답변으로 대신했다.

또 현재 북한에 머무르고 있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세번째 북으로 향하는 폼페이오 장관의 손에 한반도 비핵화 해결을 위한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을지가 관건이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하게 될 폼페이오 장관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final, fully verified)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 합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FVD’로 요약할 수 있는 이 표현은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한 것이란 평가다.

당초 미 정부가 견지해온 북한 비핵화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또는 De nuclearization)였다.

하지만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선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최종 합의문에 들어갔다.

5일 북한을 방문하게 될 폼페이오 장관이 이치럼 ‘FFVD’라는 새로운 용어를 꺼낸 것은 비핵화 ‘검증’(Verifiable)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3차 방북을 앞두고 불거지는 북미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고려됐다는 평가다.

한편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핵화 일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타임라인(시간표)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더 나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1년 이내 시간표’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부 인사들이 시간표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런 시간표를 내놓지(provide)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승호 기자



‘남북이 한팀’ 통일 이론 농구단

4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통일농구 혼합경기에서 남북 ‘평화팀’ 남자 선수들이 손을 잡고 입장하고 있다. 혼합경기는 남북 6명씩의 선수로 구성된 ‘평화팀’과 ‘반영팀’이 경기를 펼친다. /연합뉴스

##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동반성장협’ 출범

# 중소와 동반성장하는 공공기관들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공공기관들이 서서히 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협력 중소기업들과 소통·교류를 넓혀가기 위해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를 출범했다.

한국남동발전이 공공기관 중 1호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운동’에 참여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중부발전도 동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한수원은 전남 광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재훈 사장과 협력중소기업 75개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는 한수원과 협력 중소기업, 중소기업들 상호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교류활동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꾸려졌다.

협의회에는 기계기술, 계전기기술, 일반기술, 해외시장개척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75개 협력사가 함께 한다.

협의회는 분야별 운영계획에 따라 정기총회, 간담회, 벤치마킹 등 교류 및 협력활동을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수원은 교류활동비를 지원하고 한수원 동반성장사업 우선참여 기회를 제공해 협의회

## 《남동발전 임금격차 해소 추진 방안》

기업별 추진사항	종업원 인건비 지원 (50억원)
	공동기술개발 지원 (260억원)
	Test Bed 지원 (15억원)
	창업기원 육성 (30억원)
	글로벌 육성사업 (24억원)
	생산성 향상 지원 (27억원)
경영안정 자금지원	해외진출 지원 (9억원)
	동반성장 협력대출펀드 조성 (100억원)

및 회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원전산업 생태계를 보존,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수원은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반위가 올해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임금격차 해소 운동도 자원이 확대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중견기업 10곳 중 6곳 “北진출 계획 없어”

기업 306곳 남북경협 의견 조사 최우선과제 ‘정책 일관성’ 39%

## ahp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남북경제협력 이 활성화되도록 북한 시장 진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4곳만이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세울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성공적인 남북경협을 위해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정책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최근 중견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4일 발표한

‘남북경협에 관한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8%는 남북경협 분야 진출을 위한 사업 재편 및 신규 사업 기획을 장·단기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56.2%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또 남북경협 관련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일관성 있는 남북경협 정책 추진’(38.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장기적 마스터플랜에 따른 체계적 산업인프라 구축’(30.7%), ‘실질적인 투자 보장 지원책 마련’(19.0%), ‘북한시장 선점 위한 남북간 경제협정 체결’(5.2%) 등

이 그 뒤를 이었다.

남북경협에 따른 북한 진출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남북경협 지속 불확실성’(61.1%)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외에도 ‘초기 투자비용 확보 및 높은 진입장벽’(17.3%), ‘물류·에너지 등 산업 인프라 부족’(11.8%), ‘재산권 및 기술보호’(4.6%) 등을 많이 지목했다.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 수준은 ‘약간 기대’(44.8%), ‘보통’(33.7%), ‘매우 기대’(12.4%), ‘별로 기대 안함’(6.8%), ‘전혀 기대 안함’(2.3%)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